

공공사업, 대기업 건설사만 배불린다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5위권 건설사 독점 수주

정동영, 공영개발방식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 업자들이 독점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찰과 함께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동주택 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 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뉴스 대책 12월 발표

방통위, 자율규제에 초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한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 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가짜뉴스 신고 센터 운영과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 올비른 인터넷이용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하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 (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체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참고로 LH의 ‘민간참여형 공동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주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체(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

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폐와 가격dump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터키(설 계시공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김진성 기자



피곤한 국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 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업무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회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키워야”

국가재정사업 전환 마땅

“미래지향적 투자해야”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근거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

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 (2단계 공사비), 1단계 포함 경우 2조 5593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당초 민간자본 유치 전략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는 ‘공공 기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음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빌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라며 해수부와 기재부 차원의 통 큰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면역 살립 성장 엔진이기에 물동량을 ‘동네 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199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도 새만금에 2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투자

페이스북 가짜뉴스 거름망, 한국은 차별

EU 모범사례 14개 중

국내서는 5개만 적용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3분의 1에 불과해 가짜뉴스 차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이 함께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차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

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곳에서 올해는 17개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홍영표 “국감 첫날, 비방·정치공세 난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했을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하루였다”고 아쉬움을 털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 대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국감 첫날인 어제 근거 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야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비준 등에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새 질서에 훼방을 놓으려는 공세만 이어갔다”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국당은 남북경협에 수백조원이 든다. 대북제제를 무시하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비방만 퍼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장해제라는 말도 했다. 남북경협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2014년 쌍수를 들어 통일 대박을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왜 대북 퍼주기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

그는 “보수야당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다”며 “보수야당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돈에 환장해 있다. 5.24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 천안함(폭침) 사과를 받자는 말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의 국감 질의”라며 “남북관계를 어린애 장난식 거래쯤으로 디루겠다는 발상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제사법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질의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며 “그간 대법원장을 국회가 증인 세운 전례가 없었다.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권한 행사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수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경쟁을 국감으로 만들려 했다”며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보수당이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변산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료승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먹거리 : 특산품 전시 및 시식

부안군